

'기본사회·지역완결 의료'로 삶의 질 대전환

광주·전남이 통합되면 특별시민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기본사회 실현과 지역완결형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축으로 시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기본소득 기반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고령자·농민·예술가·학습자 등 다양한 계층이 존중받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빈틈없는 돌봄공동체와 인공지능 기반 기술복지를 통해 장벽 없는 스마트도시로 도약한다는 비전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6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광주전남 통합 복지·보건·의료분야 미래 비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복지·보건·의료분야 설명회는 지난 20일 효령노인복지타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으며, 특별법 추진 상황 공유와 분야별 비전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선미 광주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은 특별법 추진 경과와 정부 특전(인센티브), 20조원 재정 지원의 운용 방향, 394개 특례 조항을 중심으로 ▲미래 첨단산업의 신성장축 ▲기본사회 실현과 포용적 복지 혁신 ▲60분 광역생활권 등 통합특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통합특별시의 복지·보건 비전은 '기본사회 실현과 포용적 복지혁신'에 방점이 찍혀 있다. 시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와 지

■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미래 비전 설명회- 복지·보건·의료
20조원 재정·특례 기반 복지·보건·의료 미래 비전 제시
기본소득 기반 안전망·24시간 응급 필수의료체계 구축
AI포용복지·60분 생활권 등 장벽없는 스마트도시 구현

방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미래형 복지모델을 구현하고, 지역에서 필수 의료와 연결되는 보건·의료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사회 실현 특례', '저출생대응기금 설치 특례', '통합특별시 돌봄특구 지정', '인공지능 약자 보호' 조항이 담겼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기반 활력 도시 ▲빈틈없는 돌봄 공동체 ▲장벽 없는 스마트도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통합특별시는 전 생애 국가책임 돌봄을 강화하고, 24시간 응급 필수 의료안전망을 구축해 '응급실 뺨뺨이 제로'에 도전한다. 지역 내에서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가 해결되는 지역완결 의료망을 확립하고, 지역의사 양성과 공공의료재단 설립, 지방의료원 국가 운영경비 우선 지원 등을 통해 의료격차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각종 기본소득 기반 수당체계를 확립해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이동·소통의 장벽을

낮추는 기술복지 모델을 도입한다. 고령자와 교통약자, 정보취약계층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복지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노인복지와 의료체계, 광주·전남 간 광역교통망 확충, 기업 유치와 산업·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광주시는 '불이익배제 금지' 원칙 아래도·농간 생활권과 접근성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체계를 유지·확대하고, 국가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 체계 구축 계획을 설명했다. 또 광역철도·광역BRT 확충,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60분 광역생활권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와 청년인구 유입과 관련, 인공지능·미래차 등 첨단산업 연구·실증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확장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6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복지·보건·의료분야 미래비전 설명회'에 참석해 기본사회 실현 특례, 저출생대응기금 설치 특례 등이 담긴 통합특별법에 대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광주시제공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의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차원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선택"이라며 "통합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 산업 중심 도시를 만들고, '인(In)서울'이 아닌 '인(In)광주, 인(In)전남'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복지·보건·의료 분야뿐만 아

니라 산업, 에너지 분야 등 분야별 비전 설명회와 입법 설명회를 이어가며 시민들과 통합에 대한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광훈 기자

전남도, 특별법·조례에 따라 여순사건 실무위 재구성

임기 만료한 2회 연임 위원 해촉·유족 등 추천인사 2명 위촉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위임 임기 만료에 따라 2회 연임 위원을 해촉하고 유족 등의 추천 인사 2명을 신규 위촉하는 등 실무위원회를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실무위원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된다.

특히 위임 위·해촉은 전체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균형성을 고려해 이뤄졌다. 해촉은 2회 연임 후 임기가 만료된 위원으로 한정해 인선의 객관성을 확보했고, 신규 위원은 기존 유족회·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2명을 위촉했다.

이번 재구성을 통해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실무위원 선정 과정의 '밀실 선정' 및 '행정 독단' 주

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밀실 선정 및 조례 위반' 주장에 대해선, 기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정기적 절차에 따른 조치였음을 분명히 했다.

현행 조례상 위촉직 위원은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으며, 특정 단체 추천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강행규정도 없다. 관련 조례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위원장(도지사)이 위촉·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유족과 시민사회 배제' 의혹에 대해선, 신규 위원 2명은 유족회·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했던 인사라는 점을 설명했다. '특정 지역 편중 행정' 주장에 대해서도 시군의 사전 수요조사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전남도는 특히 성명서에 동참한 것으로 발표된 일부 단체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

가 해당 내용에 사전 동의하지 않았던 것도 확인했다.

전남도는 이번 인선이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의 이행이며, 어떠한 절차적 하자 없이 적법하게 완료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길용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공정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운영에서 출발한다"며 "일부 왜곡된 주장으로 70여 년을 기다려온 진상규명의 대의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유족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여순사건이 상생과 화합의 역사로 기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실무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여순사건이 지역의 아픈 역사를 넘어 국가적 기억과 화해의 역사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광수 기자

전남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213개 후속과제 점검

대한민국 광역 통합 1호 안정적 출범 준비... AI·에너지·문화수도 등 제도 기반 구축 논의

전라남도는 2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황기연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후속 대응과제 보고회를 열고, 7월 출범을 앞둔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213개 핵심 과제를 점검했다. 보고회에선 오는 7월 대한민국 제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분야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했다.

특히 인공지능(AI)·에너지·문화수도 조성 등 통합특별시의 핵심 비전 실현을 위한 법령·특별시 조례 정비, 재정 확보, 권한 이양, 대응계획 수립 등 제도 기반 구축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전남도는 이날 보고회에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고도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문화·예술·관광 인프라 확충 ▲지방투자 진흥과 산업단지 활성화 ▲광역교통망 확충 ▲농수산업 첨단화와 권한 이양 ▲행정통합에 따른 조직·재정·권한 조정 등 분야별 세

부 과제를 공유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점검했다.

지난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이 통합을 추진 중인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시화된 만큼, 선제적이고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남도는 특별법 통과 이후 예상되는 행정·재정·조직 운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해 국가 지원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도민 의견 수렴과 소통을 확대해 통합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황기연 부지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선도할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실국이 업무별 이행 로드맵 구성과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소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의 핵심은 결국 경제와 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권한과 재원이 향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광주광역시와도 변화하는 행정 수요와 업무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준비를 통해 행정통합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염선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제 27회 ————— 구례에 피어하는 노란 설렘

구례산수유꽃축제

산수유가 깨우는 봄, 그 찬란한 시각
당신을 초대합니다

2026. 3. 14.(토) - 3. 22.(일)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 관광지 일원

개막식
일시 : 2026. 3. 14.(토) 오후 3시
장소 : 산수유꽃축제 상설무대
(전남 구례군 산동면 상관길 45)
• 손태진과 함께 ~

주최/주관
구례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Gurye Sansuyu Flower Festival Propulsion Committee

후원
전라남도 Jeollanamdo
구례군 GURYE County

초대장
구례 산수유꽃 축제